U대회 선수촌 이주대책 추궁

김민종 시의원 "입주자 상당수 취약계층"

市 "임대아파트 알선 등 불편 없애겠다"

18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1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선수촌 건립에 따른 세입자 이주대책 및 사후 활용 문제와 U대회 관련 시설 개보수 계획 그리고 U대회 재원조달계획 등이 논란이 됐다.

김민종(민주·광산 4) 의원은 이날 시정 질문을 통해 "화정주공아파트 입주자 2900세대 가운데 80% 이상이 세입자이며, 이 중 30%가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이라며 이들의 이주대책과 함께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애초 U대회 경기장 신설과 관련, 어등산 종합체육관을 체조경기장으로, 수완 경기장을 국제규격의 시설로 건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영장은 광산구에서 남구로, 서구엔 선수촌, 북구에는 야구장, 동구에는 광주 FC 축구연습장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라며, "최근 U대회 경기장 신설과 관련해 이미 사회적 합의를 거쳤음에도 자치구별 균형발전을 핑계삼아 비공개로 배분하려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운태 광주시장은 "화정주공아파트의 경우 올 연말까지 이주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LH공사나 도시공사가 건설해 올해 말까지 공급하게 될 임대아파트 등을 알선하는 등 이주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세입자 지원대책 추진을 위해 공무원, 조합, 시공사 합동으로 현장 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시민추진협을 구성해 관련 현안을 협의·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강 시장은 또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에 적극 협조 요청을 할 것"이라며 "U대회 경기장 위치 선정은 U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추진중인 용역을 바탕으로 종합적·합리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주연(민노·비례) 의원은 "U대회 총사업비가 2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전 의원은 또 "광주 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재정 및 마케팅 전문가, 각급 정부의 재정담당자, 전문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재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재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데다 구성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재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입장과 엄격한 재정계획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처음 산출된 총사업비 4395억원은 유치신청시 타 시·도 국제대회 등을 참고해 개략적으로 사업비를 산출했으며, 이후 변동사항은 경기장 및 훈련시설 신·개축 7개소 증가와 경기장 진입도로 확장 등이 추가로 발생해 증액된 것"이라며 "광주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해 대회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가급적 절감하고, 특별교부세 요청 등의 별도 국비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시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위원회를 올 하반기에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난 17일, 중국 F1(포뮬러원) 그랑프리 결승전이 열린 상하이 국제 서킷에는 오전 일찍부터 관람객들이 몰려 관중석이 가득 차는 등 축제분위기가 연출됐다. 〈광주사진공동취재단〉

재계약 후 첫 대회 '상하이 F1'의 시사점

막대한 재정부담… 견실한 국유회사 통해 지원

17일 막을 내린 올해 중국 상하이 F1 그랑프리는 막대한 재정부담 때문에 대회개최가 불투명했었다는 점에서 전 세계 모터스포츠계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7년간(2004-2010) 대회를 운영한 뒤 재계약 시점에 불거졌던 중국의 F1대회 재유치 논란은 '상하이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와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느냐'는 물음을 던졌고 이는 한국 F1대회에도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 상하이의 재유치 논란이 결국 '돈'문제였던 만큼 지난해 첫 대회를 개최한 이후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진 한국 F1대회도 '상하이의 선택'에서 얻을 수 있는 점이 분명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완공된 상하이 경주장은 상하이시 등 4개 공공기업이 4억 5000만 달러를 들여 만든 경주장으로 이들이 중국 F1대회의 개최권과 운영권을 갖고 있어 사실상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나 마찬가지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상하이시에만 이를 맡기지 않고 견실한 국유회사를 통해 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경주장 건설비용을 제외하고 1년에 5000만달러 이상이 필요한데다 이를 7년동안 쏟아부었던 천문학적인 돈이 제대로 효과를 냈느냐는 점은 중국이 대회를 포기할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온 배경이 됐다.

중국도 재계약 직전까지는 이런 뉘앙스의 몸짓을 취했지만 그러나 지난해 2011 F1대회 캘린더 작업이 종료되기 직전 F1대회 잔류를 선언해 모터스포츠계의 이같은 부정적인 전망을 불식시켰다.

중국이 F1대회 잔류를 선언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4억5000만달러짜리 경주장을 그냥 놀릴 수 있었겠느냐는 것에서부터 애초부터 재계약을 포기할 마음도 없었으며 대회운영 비용의 가장 큰 부담인 개최권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이 F1대회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F1대회 만큼 중국의 경제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대외에 알릴수 있는 대형 이벤트를 찾기 힘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 F1대회조직위 관계자도 "세계 최고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기술력을 겨루는 대회를 중국에서 개최하고 그 경주장이 중국인들로 가득 차는 '선진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중국이 포기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 F1대회 결승전이 열린 이날 2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상하이 서킷의 스탠드는 재유치 논란에도 불구하고 폐쇄된 외곽 스탠드를 제외하고는 올해도 관람객들로 가득 차 이같은 기대에 부응했다. 이는 단순히 흑자·적자의 수치계산만으로는 나타낼 수 없는 '개최국 효과'를 모터스포츠의 불모지인 중국이 7년간 대회를 치른 이후에도 계속 누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무관심과 운영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F1대회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F1대회는 전 세계의 주요도시를 돌며 열리는 특성상 개최국이 20개국에서 크게 늘어나기 어렵다. 국내 모터스포츠업계는 지금도 10여개국이 'F1캘린더'에 들어가기 위해 치열한 로비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보다 나을 것이 없는 모터스포츠 불모지인 한국이 이 같은 기회를 스스로 져버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점을 한국도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李대통령 "장애인 최고 복지는 일자리 제공"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장애인의 날'(20일)을 앞두고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63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자립 의지가 있고 일할 수 있는 분들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라고 늘 생각했다"면서 "제가 만난 많은 장애인은 땀 흘려 일하면서 삶의 보람을 느꼈고, 가족이나 이웃과도 더욱 친밀해졌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50인 이상 민간기업과 정부·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각각 2.3%와 3%라는 점을 언급하고 "빙그레와 국민연금공단처럼 장애인 고용을 앞장서 실천하는 기업과 공공기관도 있지만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아직도 법정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는 대신 고용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제도 이전에 의식과 문화가 바뀌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아이웨이웨이 석방 요구 시위

중국의 저명한 설치 미술가이자 인권운동가인 아이웨이웨이(艾未未. 53)가 구금된지 2주가 지난 가운데 홍콩에서 아이웨이웨이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했다.

홍콩의 야당 성향 범민주파 정당인 사민련 당원들과 '중국의 애국주의적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홍콩 연대' 회원들, 미술가 등 100여명은 일요일인 17일 홍콩섬 서부에 위치한 홍콩 주재 중국 연락판공실 앞에서 아이웨이웨이의 석방과 6·4 톈안먼 민주화운동 재평가 등을 요구하면 시위를 벌였다고 현지 신문들이 18일 보도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의 제지선을 뚫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6명이 경찰에 일시 연행됐다 풀려나기도 했다.

홍콩 경찰은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해 이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경찰차로 일시 데려갔다 풀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영암 F1·영산강 사업 집중 점검

도의회 18일부터 도정질의

전남도의회가 18일부터 12일간 열리는 259회 임시회 기간 중 F1·지방산업단지·영산강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도정 질문에 나선다.

도의회는 특히 이번 '일문일답' 및 '일괄질문·답변' 방식의 도정 질문을 병행하면서 F1·투자유치·영산강 사업·구제역 백신 접종 문제 등 도정 전반에 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치밀한 정책 검증과 추궁에 나설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첫날인 20일에는 강우석(영암 2·민주), 서옥기(광양 2·민주), 정빈근(여수 4·민주), 김옥기(나주 2·민주) 의원이, 둘째 날인 21일에는 박철홍(담양 1·민주), 김탁(목포 4·민주), 강성휘(목포 1·민주), 명현관(해남 1·민주), 박병학(교육의원), 이광일(여수 1·민주) 의원 등이 주요 현안에 대한 도정 질문을 벌인다.

김옥기 의원은 특수목적법인(SPC)의 사업포기 이후 좌초된 채 방치되고 있는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 문제와 '운하 논란'이 일고 있는 영산강 뱃길 복원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진다는 계획이다.

서옥기 의원과 강우석 의원은 F1대회 마케팅 전략 및 추진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구제역 백신 접종에 따른 문제점 등도 캐물을 예정이다.

이기병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은 "효율적인 도정질문을 위해 질문 의원간 내용을 공유하고, 지역 민원성 질문보다는 도정 전반에 대해 세밀하고 꼼꼼하게 도정질문을 하도록 주문했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